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광명시민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곽 은) 문의 허정호 운영위원장, 02-2614-1224 / kmkm2006@hanmail.net 박문경 사무국장, 02- 895-1966 / gmywca@naver.com
발신일	2023년 9월 18일(월) / 총 4쪽
내 용	[비정상 제9대 광명시의회 정상화 촉구성명] 1. 광명시의회 반복적인 파행, 도덕성 훼손 의장, 부의장은 물러나야 할 때이다! 2. 광명시의회는 즉각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부의장 성비위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라!

1. 13일 제279회 광명시의회의 임시회는 국민의힘 전원 불참, 더불어민주당 단독 안건 처리, 성희룡 등 의원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부의장 불심임을 처리하였습니다.

2. 이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반복되는 광명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의장직 사퇴와 성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며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광명시의회를 규탄하고 시의회 민주주의가 정상화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 1. 성명서 전문

자료 2. 성명서 전문

자료1. 성명서 전문

광명시의회 반복적인 파행, 도덕성 훼손 의장, 부의장 물러나야 할 때이다!

광명시의회 파행, 반쪽짜리 시의회, 의회 내 성비위 사건
광명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의장과 부의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의 2번의 광명시의회 파행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하 '국힘') 시의원들이 민생은 뒤로한 채 거대양당 '힘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재선으로 시의회 경험이 있는 시의장과 부의장의 책임은 더 크다고 판단한다.

광명시의회 파행은 지난 3월23일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국힘 5명의 보이콧으로 민주당 6명의 시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하는 반쪽짜리 시의회로 시작되었다. 당시 국힘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을 독재적, 비민주적이라 규탄하고, 토론과 협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임시회의 의사 운영을 불참하겠다고 밝혔었다. 또한 지난 8월7일 국힘 광명시의원 5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성환 의장 배우자와 친인척이 광명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 "시의원의 기본 덕목인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의장직 자진사퇴를 촉구하였다. 이어 지난 9월4일 국힘 이재한 대표 의원과 소속 의원들은 안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접수하였고,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시의회 국민의힘이 제출한 안성환 의장 징계안에 대해 '징계 대상 아님'으로 판단하였다. 이미 지역 여론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국힘 2명, 민주당 3명으로 안성환 의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안성환 의장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대상 아님'으로 판단하였더라도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 구조상 '가족과 친인척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부적절하다. 또한 '반복적인 의회 파행', '성비위 사건을 수단으로 상대 정당의 부의장을 불신임 안건 강행' 등 의회 안팎으로 안성환 시의장은 사회적 비난과 갈등을 고조시킨 장본인으로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구본신 부의장도 의장단의 한 축으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닌 의장과의 대립각만 세워 광명시의회 파행에 한몫했다. 시민협은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보이콧(장외투쟁)이 아닌 당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보이콧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구분신 부의장은 한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진 성비위 사건으로 의원 자질에 대한 의심 받고 있고, 시의회에서 불신임을 받았다.

이에 시민협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피폐해진 민생을 돌보지 않고 당리당략(黨利黨略)만 일삼는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의원들을 모두 규탄한다. 또한 시의원 선배이자 거대양당에서 각각 선출된 안성환 의장과 구분신 부의장의 무능함이 14개월 만에 드러났다. 더욱이 사회적 논란, 도덕적 문제에 휩싸인 안성환 의장과 구분신 부의장은 광명시의회를 정상화하려는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스스로 의장단직을 사퇴해야 한다.

끝으로 시민협은 불통과 비윤리적인 광명시의회를 거둬내고 광명시민들만을 바라보는 정상적인 광명시의회로 거듭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시의회 파행과 사회적 논란이 있는 안성환 시의장은 스스로 의장직에서 사퇴하라!
- 성비위 사건으로 의원 자질이 의심되는 구분신 부의장은 불신임을 받아들이고 시민들과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하라!
- 광명시의회는 광명시민들만을 생각하는 새로운 의장단을 즉각 구성하라!

2023년 9월 18일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경실련, 광명YWCA, 광명YMCA, 광명만남의집, 광명여성의전화,
광명NCC, 광명불교환경연대, 경기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자료2. 성명서 전문

광명시의회는 즉각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성비위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라!

광명시의회 여성시의원들은 제9대 광명시의회 회기 시작 때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에 노출되어 왔다.

지난 5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중 오전 상임위 질의 후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던 중 여성시의원이 차(시의회 버스 차량) 안에서 성희롱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성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 버스 안에는 시의원 및 시의회 관계자들이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도 구본신 의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으며 즉각적인 후속 대응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광명시의회 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곧바로 피해 여성 의원은 구본신 의원에게 평소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여러 번 지적하였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얼렁뚱땅 넘어갔다.

구본신 의원은 “아, 이뻐네. 몇 놈이나 자빠뜨렸어”, “작은엄마”, “여보, 집에 가서 기다려”, “우리 집으로 와”, “집에 가서 씻고 기다려” 등 성희롱과 “커피 타 와라”, “여자가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어”, “내 손으로 커피 타본 적 한 번도 없어”라는 성차별 발언으로 여성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혔다.

특히, 광명시의회 시의원 전원은 지난 5월 11일 젠더 고정관념에서 시작되는 성폭력, 성희롱 실태에 관해 유형별 사례, 예방과 대처 방법 등을 강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 개념적인 행동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성평등 개념이 눈꼽만큼도 없는 이번 사태로 광명시의회의는 회식 등 의회 조직 문화 점검과 의원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차별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광명시민을 대변하여 일을 하겠다고 하여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의원이 더 높은 도덕적 의식과 행동이 요구되는 위치에서 성 평등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여성 인권을 짓밟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광명시민의 입장에서 부끄럽고 충격적인 일이다. 광명시민은 직접 뽑은 시의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징계와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구본신 의원은 광명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순간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이는 여성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편견과 성차별 의식을 지니고 있기에 지속적인 성희롱을 해왔다. 성폭력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책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광명시의회 의장은 의회 내 여성의원 대상 지속적인 성희롱이 발생함에도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 엄연히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다 사건이 공개되자 피해 사실을 축소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는 절대 용서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 의장으로서 이러한 사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사과하라.

광명시의회회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광명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조속하게 마련하고,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 즉시 피해자를 업무공간에서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하여 피해 의원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즉각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태의 엄중한 책임을 지고 광명시의회회는 즉각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가해자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계 절차를 이행하여 동료의원 감싸기, 형식적인 가벼운 징계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형식적인 경징계로 광명시민을 기만하려 한다면 광명시의회 모두가 광명시민으로부터 불신임 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이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광명시의회회는 즉각 윤리특위 구성하여 신속하게 성비위 사건을 조사하라!
-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라!
- 광명시의회회는 성폭력·성차별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성비위 징계기준을 포함시켜라!
- 성희롱, 성차별을 일삼는 구본신 의원은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하라!

2023년 9월 18일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